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공동결의문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에서 온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진행하였다. 참가하기로 예정되어있었던 북한 대표들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북한 대표들이 발제문을 보내주어 이번 주제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개 나라의 의사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1995년 전후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리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되는 오늘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같은 명백한 인권 범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한다. 우리들, 회의에 참가한 모든 피해자와 대표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로기금안'은 일본정부 당국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규탄하고 이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일 정부가 아시아 각국을 다니면서 민간위로기금안을 받아들이도록 피해자와 피해자단체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다.

일본군'위안부'제도는 일제가 아시아의 침략과 전쟁 에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과 범죄를 반성하는 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 전쟁의 아픔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가슴속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분노 속에서 지속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채,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 내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의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여성의 인권과 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에서 이러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한다.

1993년 10월 22일 제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다음 사항을 재차 일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 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 3차 보고서를 제출 할 것

3. 일본정부는 기만적인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 정부는 상설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6.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과거 침략 역사와 평화인권 사상에 대한 2세 및 시민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든 여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땅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과 폭력을 퇴치하고 나아가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소중히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2.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한다.
3.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제안한 권고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편다.
4. 일본정부가 PCA 중재에 응하고 특별 배상법을 제정하도록, 각국의 운동을 확대한다. 또한 일본 국회가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 전쟁반대결의, 특별 배상법 제정을 하도록 요구하며, 특별히 일본 내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5.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세계에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알리고, 세계여성운동과 연대한다.
6. 세계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금지’ 조항위반을 들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세계 각국 노동운동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7. 아시아 피해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게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민간운동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8.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한다.

1995년 2월 28일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